

오피니언

다산포럼

송재소



세계적인 건축가 아르 토티가 지난 3월 서울에 와서 가장 인상적인 것이 무엇이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한국에 오면 가장 인상적인 게 도시 야경 속에 빛나는 십자가예요. 교회가 정말 많죠. 올 때마다 십자가는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앞뒤 문맥으로 보아서 그가 ‘가장 인상적’이라 말한 것은 그래서 좋다는 말이 아니다. 건축가의 안목으로 볼 때 지나치게 많은 십자가가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말로 들린다. 그러나 건축가 아닌 시선으로 본다면 십자가가 건다는 사실을 꼭 나쁘게만 볼 수는 없다.

십자가가 많다는 것은 교회가 많다는 것이고 교회가 많다는 것은 기독교 신도의 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를 믿고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많은 걸 나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무늬만 기독교 신자’인 사람 또한 많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더구나 기독교를 이끌고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최근에 보여준 부적절한 언행이 더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69개 교단과 19개 단체가 가입한 개신교회 최대 연합단체인 한기총의 길자연 대표회장님이 법원으로부터 직무정지 판결

도시 야경속에 빛나는 십자가

을 받았다.

이유는 인준 절차상의 하자이지만 돈 선거로 인한 후유증으로 뒷말이 무성하다. 대표회장 선거에서는 ‘10당 5락’이란 말까지 나온다. 가장 정의로워야 할 종교계의 수장을 선출하는 과정이 정치판을 방불케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두고 서울신학대학교 유석성 총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교회도 물질적으로 급속히 성장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종교 권력이 생기고 이를 통해 부를 축적한 사람도 생긴 것이다. 명예욕, 권력욕, 물욕을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해 정당화하려고 하니 싸움이 일어난다. 그러다 보니 선거도 돈으로 치르고, 교회를 키워서 세습하려한다. 예수님은 그런 권력자를 무척 강하게 질책하고 비판했다.”

그렇다. ‘명예욕, 권력욕, 물욕을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해 정당화’한 데에서 한기총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칼빈대학교 총장인 길 목사는 또 교수자격 미달자인 자기 딸과 소속교회 신자 5명을 교수로 특채했다는 혐의로 교육부의 감사를 받았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그는 지난 3월 초 국가조찬 기도회에서 대통령 부부로부터 하야금 무릎을 꿇게 한 일로 세간의 비난을 받으며 있기도 하다. 도대체 자기희생과 사랑의 실천에 앞장서야 할 기독교의 지도자에게 명예와 권력과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일본에서 일어난 대지진에 대해, 여의도 순음복교회 조용기 목사가 한 말도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그는 “일본 국민이 신앙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하나님을 믿

리하고 우상 숭배, 무신론, 물질주의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가 한국 최대 교회를 이끌고 있는 원로 목사임을 감안할 때 너무도 경솔하고 너무도 편향적인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조용기 목사의 발언을 두고 독설가인 진중권씨는 “이런 정신병자들이 목사질을 하고 있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만일 조용기 목사가 “일본이 36년간 한국 국민들에게 저지른 만행에 대한 죄값을 받았다”고 말했다면 혹시 일말의 정서적 공감감을 얻을 수 있었을는지 모를 일이다. ‘하나님’을 아무 데나 갖다 붙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모독일 수도 있다.

이 땅의 기독교인들 특히 그 지도자들은 “도시 야경 속에 빛나는 십자가”가 인상적이었다는 건축가 아르 토티의 비아냥을 깊이 음미할 필요가 있다. 많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수단인 한 오지 마을에서 헌신적인 의료봉사 활동을 하다가 48세의 나이로 숨진 이태석 신부의 자세를 배워야 할 것이다. 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

〈성균관대 명예교수·전문화연구원 이사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당선 무효 선거비용, 당사자에게 환수해야

최근 5년 사이 광주·전남지역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령을 선고 받고 선거 보전 비용을 반환한 사례는 14명에, 반환 액수는 6억5000여만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공직선거법 등에 지난 2005년 이후 선거관련 범죄로 당선 무효가 된 경우 해당 선거비용이 당사자에게 고지한 뒤 30일 이내에 비용을 반환토록 하는 조항이 신설된 데 따른 것이다.

불·탈법 선거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갈수록 늘어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커진 데 대한 제도적 개선책이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전주전선 광주 서구청장과 전형준·전완준 전 전 장흥군수, 김인규 전 장흥군수, 유두석 전 장흥군수 등 14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낙마하면서 6억5000여만 원을 반환했다.

하지만, 이렇게 당선 무효자 등에게 선거비용을 환수하더라도 재·보궐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에는 훨씬 못 미치는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실제로 선거위가 4·27 화순군수 재선거에 들어갈 비용을 8억 1400여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전남 순천 군수에게 추정할 수 있는 비용은 1억5000여만 원에 불과하다. 7억1000여만 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셈이다.

화순군의 지난해 재정자립도는 21.6%에 불과하며, 재·보궐선거를 치른 광주 서구 역시 22.1%, 장성군 10.7%, 장흥군은 9.9%로 공무원들의 봉급조차 줄 수 없는 형편이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 막대한 선거 보전비용마저 주민의 혈세로 충당하고 있다. 그야말로 여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향후 재·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하는 제공자에게는 선거비용을 모두 본인이 부담하도록 해야만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고, 재발 방지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당장 선거법을 개정해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국민 우롱한 정유사 기름값 ‘100원 이하 쇼’

국내 정유사의 기름값 ㄹ 당 100원 인하는 결국 쇼로 드러났다. 국내 정유 4사가 정부의 압박에 지난 7일부터 기름값을 ㄹ 당 100원 인하한다고 발표했으나 실제 소비자가가는 30원 이하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정부와 정유사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소비자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등에 따르면 기름값 인하 전날인 6일 광주지역 보통 휘발유와 경유 ㄹ 당 평균가격은 각각 1952.19원과 1791.36원이었다. 하지만, 기름값 인하 시행 사흘이 지난 9일에는 1914.71원과 1763.68원으로 6일에 비해 각각 37원과 27원 인하여 머물렀다. 발표와는 달리 고작 30원 정도의 인하여 그친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정유사는 주유소에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정유사들은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주유소의 입장은 정반대다. 이들은 정유사들이 공급가를 ㄹ 당 100원 인하했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50원밖에 인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영 주유소는 전체 주유소의 85%를 차지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100원 인하’를 체감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국민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유가에 허리가 휘고 있다. 반면 정유사들은 국제유가가 오르면 곧바로 많이 올리고 내리면 싼값에 내리는 행태를 되풀이하며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내고 있다.

정부는 정유사의 기름값 인하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책임을 이행에 나서야 한다. 특히 정유사의 담합에 따른 불공정 거래체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에 앞서 유통세를 내려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정책적 결단을 하는 게 마땅하다.

NGO 칼럼

김순홍



92년 전 1919년 4월 11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날이다. 4월 13일은 이를 선포한 날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운동의 결과로 태어났다. 3·1 독립선언서 첫 줄에 ‘조선이 독립국임’을 밝혔기에 그 독립 국가의 이름을 짓고 그것을 운영할 정부를 만들고 나선 일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또한 이들 민족 지도자들은 더욱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데 우리의 정부가 필요하다는 점을 깨닫게 됐다. 마침 이 즈음에 천여 명의 한국 혁명 지사가 머물고 있던 중국 상하이에서 동계사과와 신한청년당의 인사들이 ‘독립입시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상하

운동의 발상지 ‘의향(義鄉) 광주’의 한 가운데에도 친일인사의 흉상이 버젓이 자리잡고 그의 세탁된 행적만 새겨진 채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있다. 어처구니없게, 2세 교육의 중심지인 ‘어린이대공원’의 한 가운데, 안중근의사의 동상 옆에 대표적인 친일인사 안용백의 흉상이 30년이 다 되도록 자리하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안용백은 조선총독부 학무공 편수서기로 근무하면서 여러 친일단체에 가입하여 열성적으로 활동하고, ‘문교의 조선(文教の朝鮮)’, ‘조선’, ‘농기’, ‘조선행정’, ‘내선일체’ 등의 친일 잡지에 ‘내선일체’와 각종 황국신민화 정책

기고

이화상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2010년 1인당 쌀 소비량은 72.8kg으로 전년보다 1.2kg 줄었다. 이는 10년 전과 비교 시 20.8kg이 감소한 양이며 4인 가족을 기준으로 볼 때 83.2kg이니 쌀 한 가마(80kg) 이상을 덜 먹은 결과이다. 2009년에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전년보다 1.8kg 줄어 74.0kg으로 떨어졌으니, 1인당 쌀 소비량이 쌀 한가마 이하로 떨어진 지 5년째다. 쌀 소비량은 1963년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뒤 1970년 136.4kg으로 정점을 찍었고 이후 등락을 보이다 1984년(130.1kg) 이후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으며, 2006년(78.8kg)부터는 쌀 한 가마 이하 수준

식품을 과잉 섭취하고 군것질을 하는 게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쌀은 단백질 공급원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양의 약 3분의1이 쌀을 포함한 곡류에서 섭취된다. 쌀 단백질은 다른 곡류에 비해 함량은 적지만 필수 아미노산인 라이신이 옥수수, 밀가루보다 두 배나 되고 체내 이용률이 높아 플레스테롤이나 중성 지방의 농도를 낮춘다. 이밖에 쌀에는 엽산을 포함한 비타민 B군은 물론 비타민 E, 마그네슘 등이 풍부하다. 비타민 E 등은 강력한 항산화작용을 하기 때문에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다. 또 요즘 쌀 연구에서 관심을 끄는 주제

임정 수립 92돌과 친일파 청산

이에선 한국의 임시정부가 태어날 여건이 마련돼 있었다.

마침내 1919년 4월 10일 저녁, 각 지방 대표 29명이 상하이 프랑스 조계인 김신부로(金神父路, 현주소 瑞金2路)에 있는 한 집에 모였고, 거기서, 임시 국회적인 ‘임시의정원’을 구성했다. 그리고 곧이어 첫 번째 의정원 회의를 열어, 임시정부의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민중공화제’를 골간으로 한 ‘임시헌장 10개조’를 채택한 뒤에, 선거를 통해 국무원을 구성했다. 그때가 날이 바뀌어 4월 11일. 그리고 이런 사실은 4월 13일에 세상에 공표됐다.

임시정부의사를 되돌아보며 오늘의 우리 현실을 생각한다. 임시정부수립 후 92년, 광복이 된지도 61년이 지나도록 우리는 일제의 강점으로 빛어진 과거사의 때를 벗겨내지 못하고 있다. 반민족위례제 이후, 친일파들이 계속 과거의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과거사가 정리되는커녕 왜곡되고 미화되어 왔다. 지난 정권에서 과거사 청산작업을 위해 노력을 했지만 마무리도 되기 전에 문을 닫았고,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이 나온지도 2년이 되어가지만 아직 제대로 보급이 되지 않고 있다. ‘민주, 인권, 평화의 도시’, 항일독립

을 찬양하고 선전하는 글을 여러 차례 기고하고, 경남 의령군수와 하동군수를 지냈던 적극적 친일행위자이다. 1959년 자유당 부정선거 ‘닭살사건’의 장본인이기도 한 안용백이 제2대 전남도교육감을 지낸 것도 한심한 일이었지만, 그의 흉상이 초·중·고생들의 소풍장소이면서 가족나들이 장소이고, 2년에 한번씩 비엔날레가 열리는 어린이대공원에 버젓이 자리잡은 채 역사를 모독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부끄럽다. 선생이나 부모들과 함께 어린이대공원을 찾은 아이들이 안중근 의사와 3·1운동기념탑을 공부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바로 옆 안용백의 흉상 앞에서 거기에 새겨진 세탁되고 미화된 글만 보고 그를 기념할 것을 생각하면 끔찍하기 짝이 없다.

1993년에 광주시의회에서 문제가 제기됐고, 2001년에는 지역언론에서도 적나라하게 문제를 파헤쳤으나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 독도문제 등에서 우리를 ‘알보는 일본’의 태도 이면이 같은 우리의 모습에 반영된 것이 아닐까.

친일파청산. 과거사정리. 얼마나 더 시간이 필요한가.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 지부장·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쌀 한가마의 격세지감

으로 떨어졌다.

식생활이 다양해짐에 따라 빵, 떡, 국수, 라면, 즉석밥, 시리얼 같은 대체식품의 소비 증가로 가계부문의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든 결과다.

필자의 집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실감할 수 있다. 미래 쌀 소비의 원천이 될 10대들의 식성을 보면 쌀이 주식으로서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으며 육류 및 여러 대체식품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0대와 20대의 아침밥 결식률이 심각한 상태이며, 다이어트와 건강상의 이유로 결식 내지 소량의 인구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쌀의 영양을 이루는 주종은 탄수화물이며 밥 한 공기 200~250g은 350kcal의 열량을 낸다고 한다. 문제는 밥을 먹으면 살이 찐다고 해서 기피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하루 세끼 밥을 먹어도 실제 우리가 하루에 필요로 하는 에너지의 65% 밖에 안 되며 몸이 뚱뚱해지는 것은 야채 중심의 전통 식사 대신 육가공

IP6이다. 현미의 식이섬유에 많은 이 물질은 대장암 예방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 IP6은 세포의 생장에 빼놓을 수 없는 물질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암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여기에 쌀에는 고혈압을 개선하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가바(GABA)라고 불리는 물질이 들어 있어 혈액 내 중성 지방을 줄이고, 간 기능을 높여위성 인병을 예방해주기도 한다고 한다.

쌀소비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전남도를 비롯한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쌀 소비촉진사업과 대국민적 행사와 마케팅 활동 등 아이디어 공모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이를 통해 쌀을 소비하는 차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서구화되어가는 식습관으로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 건강증진에도 일익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과 농촌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농협구례교육원 교수〉

일부 부유층 남골문화 왜곡 자연 훼손 안타까워

최근 국민들의 의식이 변하면서 남골당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호화분묘를 막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남골당 문화가 일부 부유층 사이에서는 왜곡되고 있어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일부 공사중인 남골묘를 보면 나무를 뽑고 산을 절개해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있다. 공사중인 남골묘지를 보면 산을 절개해 잘려 나가고 주변 남골묘들이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해가고 있다. 남골묘를 만들면서 잘린 나무들이 그대로 버려져 있는가 하면 운동 시설로 치장한 남골묘는 석물을 크기와 종류에 따라 여대를 남는다고 한다.

남골묘는 주로 산림이 울창한 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산림훼손이 불가피하다. 또 과도한 석물을 얻기 위해서 우리나라 곳곳의 자연이 또다시 파괴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욱 간소하게 규율을 한 곳에 모실 수 있고 간단하게 고인을 기릴 수 있는 그러한 표식 정도로 해서 남골묘를 설치할 수는 없을까. 너도 나도 산 좋고 물 좋은 이른바 명당자리에 남골묘를 만들면서 기존의 매장묘지와 다를 바 없이 국토가 망드는 현실, 단속보다 개인들의 반성과 자각이 중요하다고 본다. ▲관전예·순천시 가족동

無等鼓

성균관은 조선시대 최고 엘리트 교육 기관이었다. 명성에 걸맞게 입학자격도 무척이나 까다로웠다. 지금의 대학입학 시험과 마찬가지로 성균관에 들어가려면 과거 가운데 소과인 생원진사시에 합격해야 인교할 수 있었다.

또 공신과 3품 이상 관리의 자식 중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사람과 문과 및 생원·진사의 초시에 합격한 자, 현직 관리 중에서 공로가 공부할 수 있었다.

한 달 동안 공부와 시험 성적을 합산해 상위 5~10명을 ‘대성(大成)’이라 하여 예조에 보고했고 왕에게도 결과가 전해졌다.

성균관의 성적은 관리 등용 후 관직 임용의 바로미터가 되는 만큼 유생들의 경쟁이 불꽃을 튀었고 규율은 매우 엄격할 수밖에 없었다. 성현과 조정을 비난하면 처벌은 당연지사요, 그릇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거나 주색에 빠져도 징계대상이었다. 또 상급생은 하급생이 잘못하면 벌하기도 했는데 심할 경우 퇴학도 당했다. 그러

나 성균관의 규율과 징계는 어디까지나 윤리와 인륜에 바탕을 둔 도덕성이 근간이었다.

최근 우리나라 이공계 최고 대학인 카이스트 학생의 잇따른 자살로 충격이 크다. 이들의 죽음은 이른바 ‘징벌적 등록금’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다.

카이스트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등록금을 내지 않는다. 그러나 대학 측은 경

력 제고를 명분으로 지난 2007년부터 두 학기 학점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0.01점 당 6만 원을 내도록 하는 등록금제도를 도입했다. 이 결과 2008년 등록금을 낸 학생은 302명에서 2009년 611명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000명을 넘어

갔다. 또 모든 수업에 영어로 진행했다. 하루 2~3시간만 자더라도 ‘상대평가’라서 누군가는 반드시 등록금 폭탄을 맞게 될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살인적인 규율이 연쇄자살을 불러낸 것이나 주색에 빠져도 징계대상이었다. 또 상급생은 하급생이 잘못하면 벌하기도 했는데 심할 경우 퇴학도 당했다. 그러

성균관, 카이스트



정력 제고를 명분으로 지난 2007년부터 두 학기 학점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0.01점 당 6만 원을 내도록 하는 등록금제도를 도입했다. 이 결과 2008년 등록금을 낸 학생은 302명에서 2009년 611명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000명을 넘어

Table with 2 columns: 光 州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vertising rates.